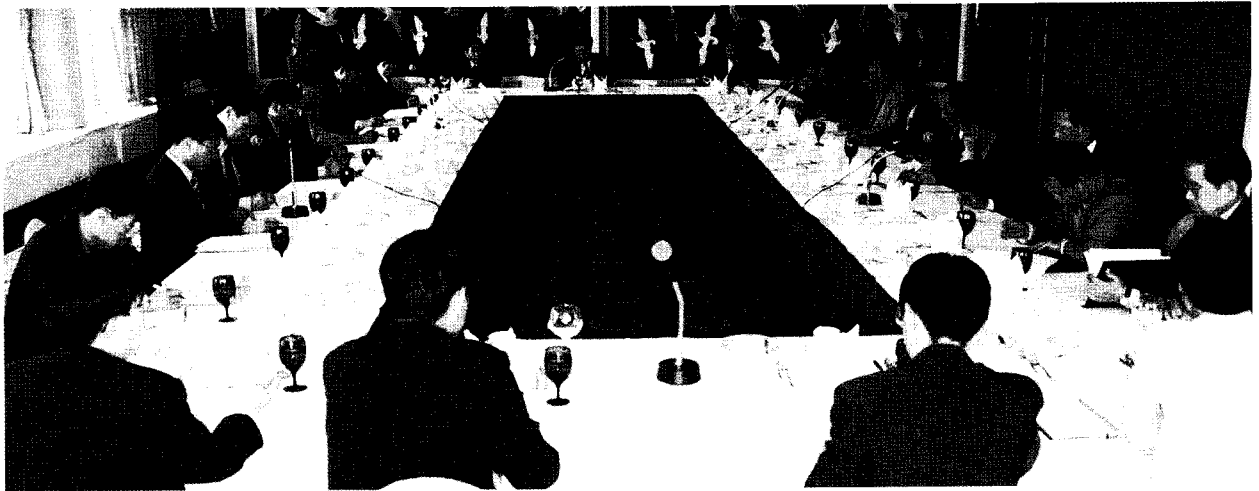




#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산** 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ESCO, ESCO협회 등 ESCO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5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ESCO들은 금리문제 등 업계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했고 정책 당국자들은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이원걸 국장, 에너지관리공단 이명용 사업본부장, ESCO협회 최석곤 회장, ESCO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이원걸 국장(자원정책심의관)

99년부터 ESCO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보완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 제도측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ESCO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 만큼 애로사항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우선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최근 ESCO사업과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김종원 주무관(에너지관리기술과)

ESCO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종합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ESCO 수는 162개사로 등록 기업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올해만 해도 990억원의 정책자금이 ESCO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ESCO 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인력 부족, 부채비율 증가, 업체간 과당경쟁 심화, 협회의 위상 및 역할 제고라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배출되었을 때 성과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에 성과보증제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3개월 간의 제도 홍보기간을 두고 2003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보증제의 정착을 위해서 초기에는 성과배분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정착 후에는 성과보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자금의 활용이 안 되고 정책자금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수 ESCO

인증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수 ESCO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적격심사 기준을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 객관화 작업을 거친 후 공청회를 통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SCO협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협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협회의 준비상태를 보아가며 진행될 것입니다.



**■ 이원걸 국정자원정책심의관**

현재 산자부에서는 에특회계 편성작업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ESCO, 대체에너지, 에너지절감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인데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는 710억원이라는 놀랄만큼의 예산이 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수요창출에 ESCO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VA, 시설개체 등도 ESCO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협회의 역할 문제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 등 단체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자금조달이라든지 ESCO의 중국진출문제 등 여러모로 검토 중이며 VA와 ESCO를 축으로 에너지 정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에너지절감의 큰 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 각규천 이사금호전기**

담당 주무관이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아 ESCO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이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명업체로서 조명분야의 ESCO사업은 절감량도 적고 사업규모도 작지만 모든 국민이 쓰는 것이만큼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ESCO 품목인 32W전자식안정기가 보급되기 이전에 40W전자식안정기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40W전자식안정기를 32W안정기로 교체시 지원책을 강구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범용 사장에너지솔루션즈**

저희 회사는 전업 ESCO인데 성과보증제는 영업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원 프로젝트일 경우 3~4억원은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데 전액 성과보증제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업 ESCO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첫째, 과연 언제까지 정책자금이 지원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명확히 개정되어서 업체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원걸 국정산자부**

ESCO지원은 ESCO제도가 활성화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현재 실무진에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황태진 회장케트론**

현재 160여 ESCO 중 민간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업체들이 정책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조명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SCO사업을 할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것은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고금리로 이어져 회사의 자금 유동성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마당에 ESCO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행의 직접 대출과 정책자금 이자율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ESCO가 신용도나 제도 때문에 활용할 수 없어 ESCO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 기술신보에 갔는데 그 회사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지못해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민간자



## 지/상/릴/레이



금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ESCO의 등록 전제조건에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일년 내내 쓰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겠습니다.



###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역시 금리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에 맞추어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른 정책자금과 비교해보면 ESCO자금은 비교적 싼 편입니다. 장애인 지원자금, 농특자금 등 3%대의 자금도 있으나 그 이외의 자금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량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8~9%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신경을 써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김영길 전무세코

전업 ESCO의 입장에서 ESCO사업은 마진이 적게 남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팩토링 등 ESCO가 스스로 풀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제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ESCO사업 이외에 일반공사까지 넘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ESCO사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 심규정 부사장화인테크

8개월 동안 ESCO사업에 대해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채비율 증가라는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시책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0억원 공사를 부채증가 문제 때문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진작에 해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아직 해결점을 못찾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과보증제도는 영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ESCO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ESCO사업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도록 어떠한 회계적 강제조치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 최석근 회장ESCO협회, 삼성에버랜드

재경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대화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ESCO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금융' 인데 부채비율 증가 때문에 비ESCO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부채비율 증가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고민 끝에 한 말씀 드리자면 기술과 장비는 ESCO가 가져가고, 금융은 ESCO 전담은행을 지정해서 물건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 ■ 황태진 회장기트론

회계감사법상에 정해져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과 관에서 적절히 협의해서 확실한 채권에 대해서 팩토링을 한다면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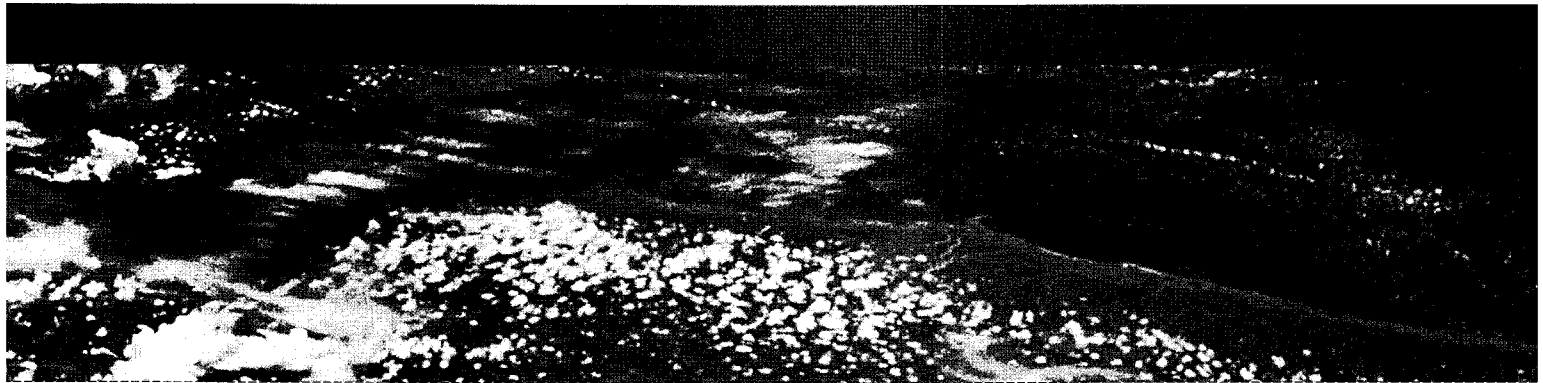
### ■ 이원걸 국장자원정책심의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ESCO와 거래가 많은 은행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혜원 팀장한리건설

ESCO팀장 겸 전기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업ESCO가 아니어서 그런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가 ESCO로 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IMF당시 인력감축 등의 문제를



겪었는데 남아도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지는 차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활발히 ESCO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만 올해는 건설사업이 호황이다보니 ESCO발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ESCO사업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같습니다. 조명개체사업이 많은데 금액이 1억원 이하가 많아 저희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APT의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협회의 위상강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업체는 많은데 협회 가입사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공사협회를 예로 들자면, 등록업무, 실적증명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율이 높는데 ESCO협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업무들의 이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걸 국장(자원정책심의관)

최근 준공된 부산대 ESCO사업의 경우 4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ESCO사업의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영역도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이 '대체에너지 원년의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도 ESCO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 활성화 문제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회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전체 ESCO사업의 실적을 조사해보면, 조명분야의 실적이 건수로는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으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큰 ESCO들은 조명개체사업을 자제해주시고 공정개선과 같은 분야로 아이템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 김동욱 사장(성림산업개발)

저희 회사는 별도로 ESCO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과당경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관공서 입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ESCO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단인데 이 진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발주처의 주관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과당경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문제도 현실을 고려해서 너무 자주 발행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 강호중 사장(아주테크)

저희도 전업ESCO로서 ESCO사업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회사와 관련된 문제로 ESCO채권의 공익채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모생명보험회사에서의 ESCO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대우자동차(한국하니웰)나 신화건설(삼성에버랜드)의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ESCO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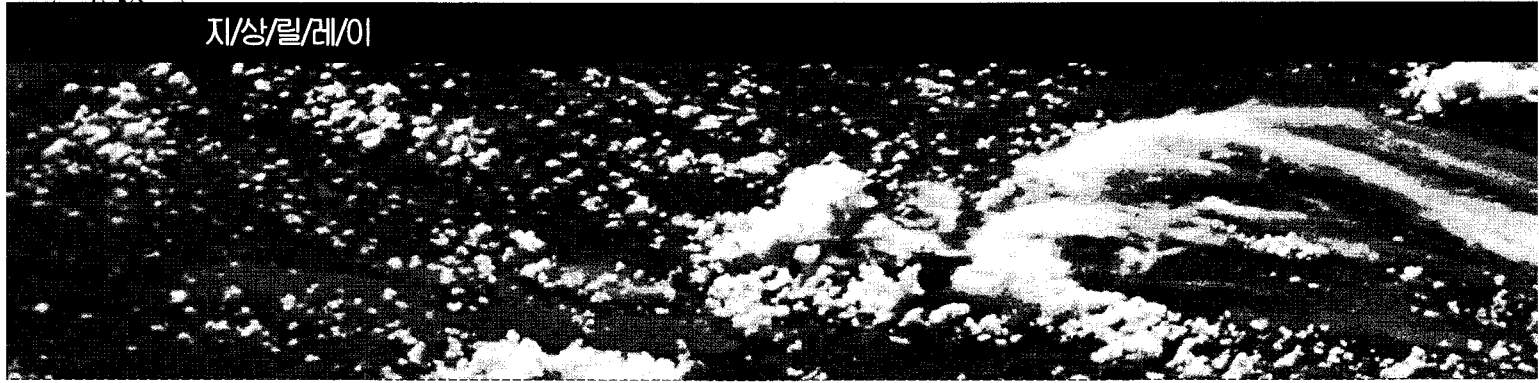


■ 김종식 상무(SK)

저희 SK는 2000년도에 ESCO 사업을 시작하여 플랜트 분야에서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ESCO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ESCO의 중국진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진출은 사실상 자금 결제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에너지 부문과 같이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지/상/릴/레이



### ■ 김준백 이사(KVTC-ENTEC)

ESCO사업을 수행할 때 자금문제 때문에 비ESCO로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차주가 되는 성과보증제는 사용자의 담보문제 때문에 사업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ESCO협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ESCO자금 전담은행(은행 기술신보 등)을 지정하여 정부자금 집행시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주는 형태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재경부와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말입니다.



### ■ 유제인 사장(HT시스템)

저희 회사는 빙축열시스템을 통한 냉·난방설비 전문인데 자금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ESCO등록을 하고 ESCO가 되어 사업을 하다보니 ESCO부분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제도는 과당경쟁이 안 되게끔 하자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보증제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파이낸싱을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협회나 공단에 기금이 조성되어 쉽게 주는 것이 아니면 ESCO보급 실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원걸 국장(자원정책심의관)

성과보증제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성과배분제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성과보증제는 ESCO를 위한 것입니다. 조명개체분야를 비롯하여 금액이 작은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입니다. 대기업도 참여하게 하고 ESCO로 전환시켜 시장 확대

를 피하려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선진국 사례도 검토하며 업계의 의견 등을 가감하여 보완 실시하려고 합니다.



### ■ 유제인 사장(HT시스템)

조금 전 앞에서 전업ESCO 말씀들이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업이 아닙니다. 건설업과 내용상 비슷합니다. 단지 파이낸싱에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158개 ESCO가 등록되었고 금년에 4개사가 등록하여 162개사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SCO 사업을 하면 돈방석에 앉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들을 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인식들을 한 것 같습니다. ESCO들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정리 내지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그 문제는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해결될 것입니다.



### ■ 김석철 팀장(한국해니웰)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협회 위상 강화 문제가 산자부 공식 자료로 나온 것에 대하여 협회 회원사로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ESCO사용자측의 지원 시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측에 소득세 감면 확대 조치 등을 해주면 그것이 곧 ESCO들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전사회 등 홍보행사시 ESCO들의 참가자들을 보면 실무자들이 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부서와의 홍보사업 결정에 있어서 회계부서의 이해 부족으로 협조가 안 되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준된 Program을 만들어 관계부서 직원들도 참여, 홍보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ESCO사업은 ESCO들이 처음



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현 제도하에서 부실한 회사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용 본부장(에너지관리공단)

ESCO업계 대표자들과 산자부 국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ESCO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계 대표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공단 홍보도 하면서 ESCO들의 진단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 수요관리사업 부문에서 ESCO들과 함께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성과가 매우 컸고 ESCO들의 진단능력 배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단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끝났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2차 수강신청을 받는데 수강신청자가 적습니다. 교육방법은 총 155시간으로 열진단, 전기진단, 계측기, 법규 등으로 되어있는데 5월에 시작합니다. 3차는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단 내부에서 민간업체들을 육성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니 성공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ESCO업체들의 소송도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어 이런 불합리한 것을 막기 위해 계량 가능한 것은 전부 계량화하여 평점을 하도록 개정중입니다. 대체적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정 의견이 반영되면 나머지 ESCO사들의 불만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체 ESCO들을 총망라하여 다시 Review하고 새로 정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경험을 많이 제공하여 주시면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에 관해

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주무관

공공기관들이 ESCO사업을 한 번 하고 나면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ESCO사업을 하면 '골치 아프다'는 식의 말들이 공공기관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SCO사업은 의무적 사항이지만 실무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협회를 주축으로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도 만들어 자료화 하였지만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회원사들이 다 동참하여 협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이범용 사장(에너지솔루션즈)

앞서 소송건 언급이 있어서 전북대 소송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에너지솔루션즈와 한국하니웰이 5~6개월 동안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양사가 합의 각서를 제출하여 3차 심사를 마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70일째 붙들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서도 제출하였지만 조달청에서는 3개 외부 자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입찰질서 문란이라 하여 입찰구매 취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즉 입찰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ESCO사업의 활성화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황태진 회장(기트윈)

협회 활성화와 관련,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협회가 수용태세가 안돼서 일을 못하니까 못준다 하지 말고 먼저 권한을 주어 일을 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후자는 160여 등록 회사중 회원사가 32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대표성



## 지상/탈/레이



이 있느냐 얘기하는데, 전기공사협회 같은데 얘기도 있었지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활성화가 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협회도 입회비 등을 적게 징수하여 협회 가입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손학식 처장에너지관리공단

그 문제는 공단과 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협회 위상 강화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주십시오.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ESCO업체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도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석곤 회장ESCO협회, 삼성에버랜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협회 설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ESCO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CO사업은 공정개선 같은 분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지정입니다. IMF당시 ESCO사업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금리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의 금리를 농특자금 수준 정도의 금리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VA도 ESCO와 연계하여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보증제도는 많은 요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도입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ESCO채권의 공익채권화도 반드시 필요하고 ESCO자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의 금리와 인출할 당시의 금리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인출시 금리를 기준으로 통일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이원걸 국장자원정책심의관

아무튼 여러 ESCO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협회가 커져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